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머리맞대'

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 체육 · 언론 · 학계 300여명 참석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책적 방향 모색 ·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제시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북 전주 DREAM KOREA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전북 전주 DREAM KOREA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 심포지엄'을 열고,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적·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전현희 국회의원,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비롯해 체육계, 언론계, 학계 주요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는 계은영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과 교수와 정관호 ㈜모노플레인 대표가 맡았다.

두 발표자는 전주 하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 전략과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개최 당위성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쟁력 평가와 국제경쟁 구도 분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조현재 전 차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세훈 경향신문 스포츠부 부장, 권종오 SBS 스포츠취재부 선임기자, 김국영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유상건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회장, 권순용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석좌연구위원이 패널로 나섰다.

이들은 국제 스포츠 미디어 동향, K-컬처 융합 전략, 선수 중심의 유치 논리, 다개최 올림픽 국제사례, 관광객 증가 대응방안 등 다각적 측면에서 분석과 제언을 내놓았다.

도는 이번 심포지엄을 발판 삼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며 세계에 K-스포츠와 K-컬처의 매력을 알리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주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올림픽 개최지로 손색없는 인프라와 잠재력을 보유한 도시"라며 "올림픽 유치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도 "도정 신뢰 훼손 시도 용서 못한다"

전북개헌운동본부 "김 지사 등 12·3 내란 부화 행위" 제기

김관영 지사 "명백한 허위 주장… 공직자 명예 훼손" 반박

"전북,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최전선… 법적 조치 취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제기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이 내란 부화 행위를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퍼뜨리는 거짓 주장은 전북도청 2,000여 공직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전북자치도의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에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침을 전달했지만, 전북도청은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계엄선포 직후인 오후 11시경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계엄 선포를 강력히 비판하며, SNS를 통해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를 표명했다.

또한 도는 불법 계엄 상황 속에서도 도민 안전을 위해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12월 4일 자정, 김 지사 주재 긴급 비상 회의를 열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전 직원 1/3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행정 공백을 막았다.

김 지사는 "전북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의 최전선에 섰던 지역"이라며 "근거 없는 공격으로 헌신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며, 도민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항 '메가포트' 도약 본격… 도, 인프라 총력

신항 2선석 공사 마무리 단계… 접안시설 90% 등 완공

항만법 시행령 개정 12월 마무리… 무역항 지정 완료 예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형 메가포트 실현을 위해 새만금항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항 기반시설 확충부터 무역항 지정, 부두 운영사 선정, 서해권 물류 거점 조성, 군산항 준설 예산 증액,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에 건설 중인 새만금항 신항은 총 3조2,476억원을 들여 5만톤급 9선석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2선석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방파제 3.1km(2016년 11월), 북측방파호안·관리부두(2025년 9월), 항로·박지 준설(2025년 11월) 등 핵심 인프라는 완공을 마쳤다.

접안시설은 90%, 북측진입도로는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추가 방파제(L=250m) 건설은 올해 사업비를 1,012억 원(184억원 증액)으로 조정했으며,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고 내년 1월 본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는 '새만금항(군산항+(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통합 승인됐다. 후속 절차로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12월까지 마무리해 무역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수청은 신항 잡화부두 2선석(5만톤급) 운영사로 CJ·선광·세방·동방 등 4개사 컨소시엄인 '새만금신항만(주)'를 10월 15일 최종 선정했다. 해상풍력 기자재, 이차전지 원재료, 농식품 등을 주력 화물로 설정함으로써 새만금항 신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조기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1-1단계 배후부지(36만평) 2,056억 원의 재정사업 전환이 필수적이어서, 도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며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거점육성 국정과제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조성을 위해 이달 12일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2025년 제2차 새만금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단,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해 새만금 K-물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도는 항만·공항·철도·도로를 아우르는 K-물류 트라이포트 체계로 물류 연결망을 강화하고, SOC 건설 일정을 앞당겨 물동량 확보와 인프라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K-물류 거점 도약을 위해 △전문가 워킹그룹의 분기별 운영 △새만금 SOC(항만, 도로, 철도 등)의 신속 추진 등을 목표로 단계적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산항은 계속되는 토사 퇴적 문제로 매년 유지준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올해 총 103억원(본예산 68억원, 추경 15억원, 예산전용 20억원)을 투입해 약 158만㎥ 규모의 준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에는 1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준설을 이어가고, 상시 준설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비도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장(금란도)의 사용 기한이 2028년 종료될 예정으로, 총 5,476억원을 들여 군산항 7부두 인근 해상에 약 215만㎡ 규모의 제2준설토 투기장을 건설한다. 올해 3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후 기본설계를 마치고, 올해 중 사업 적격자를 선정해 신속히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환경관리, 전국적 인정 받아

환경부 주관 '환경관리 실태평가서' 광역 17개 지자체 중 2위 차지

전북특별자치도가 환경부 주관 '2025년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종만 생활환경과 사무관도 환경관리 분야 유공으로 같은 영예를 안았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정읍, 김제, 임실, 부안 등 도내 4개 시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전북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2위에 올라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 만든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는 사전예고제, 중소·신규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직무교육 강화 등을 확대했다. 42개 사업장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300개소에 방지시설을 지원했으며, 시군 점검 공무원과 환경기술인 78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김종만 사무관은 20여 년간 환경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으로 도내 환경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2018년 이후 악취·대기·수질 문제 해결과 기업 환경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그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관리와 환경사고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 중소·신규 사업장 42개소에는 전문가를 연계해 기술 지원과 시설 개선 방안을 제공했다. 시군 공무원 67명과 사업장 환경기술인 715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직접 진행하며 단속 위주에서 자율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총 313억 원을 투입해 김제 용지 지역 97개소를 시작으로 도 전역 324개소에 악취 저감 시설을 확대 설치했으며, 최대 93%의 악취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2023년부터는 김제 용지 축산농가 26개소를 매입해 오염원을 차단했다. 그 결과 용암천 수질 50% 개선, 복합악취 42% 저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김제용지 매입기한 최대 4년 연장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만호 기자

미식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공 모델' 구축 박차

도, 미식 · 체험 · 콘텐츠가 결합된 전북형 미식관광 모델 운영 '호응'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고유의 미식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형 미식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전북 미식관광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군산·남원·완주 3개 시군을 선정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미식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일상이 어우러진 체류형 미식여행을 제공하면서 전북 미식관광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을 입증했다.

군산은 'Go! 군산, 섬해진미' 사업을 통해 해양 미식 체험프로그램 '씨투테이블(Sea to Table)'을 선보였다. 섬 지역의 독특한 미식문화와 전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남원은 이달부터 4가지 테마로 구성된 '남원 미식로드'를 운영 중이다. 이는 △어란 미식로드 △전통음식 체험로드 △고려만두 미식로드 △재래시장&김장로드 등으로 구성돼 남원의 숨겨진 맛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은 참가자들로부터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완주는 '완주 9품(생강·마늘·한우 등)'을 활용한 시그니처 퓨전 메뉴를 새롭게 개발했다. '완주 와일드 & 로컬푸드축제'와 연계한 미식 팝업 스토어에서 제공돼 축제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미식 경험을 선사했다.

도는 이와 함께 지역 고유의 음식문화와 식재료에 담긴 이야기를 엮은 미식관광 가이드북 '맛으로 읽는 전북이야기 Ⅲ'를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미식 콘텐츠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맛으로 읽는 전북이야기는 전북 14개 시군을 △서해안권(군산·김제·고창·부안) △동부산악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내륙권(전주·익산·정읍·완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각 권역의 대표 식재료와 지역 특색이 깃든 음식,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처럼 엮어냈다. 앞으로 다국어 번역본을 제작해 국내외 관광 박람회 등에서 전북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홍보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윤리헌장 선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27일 공사 새만금 홀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윤리경영을 공사 운영의 핵심 가치로 명확히 하는 한편, 윤리경영에 대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선언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토대로 △윤리의식 확립 △관리체계 구축 △윤리위험 통제활동 등 6대 핵심요소를 윤리경영 체계에 반영했다. 이날 나경균 사장은 "윤리헌장 선포는 청렴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재도약"이라며, "우리 공사는 그동안 경영 목표의 핵심으로 이해충돌 Zero, 부정채용 Zero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취임 이후 해당 비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 이상의 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도, 시외버스 회사 소송서 패소

전주지법 행정부, 행정소송서 버스회사에 손 들어줘

버스회사 재정적 숨통 트일 듯 하나 도민 교통권 우려

전주지법 행정부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시외버스 5개사 간 행정소송에서 버스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시외버스 회사들이 휴업 불인가 처분 취소와 누적 적자에 대한 재정 지원 미흡을 이유로 제기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버스회사에는 재정적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도민 교통권 확보에는 일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24년 2월, 시외버스 5개사는 누적 적자와 경영난을 이유로 총 62대, 76개 노선의 휴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가운데 5대, 15개 노선만을 인가하고 나머지 휴업 신청은 불허했다. 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은 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버스회사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운송원가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북도가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며 총 283억원 규모의 조기 지원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휴업 인가 범위와 예산 지원 결정이 도민 교통 편의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맞섰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외버스 업계는 경영난 해소에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재정 지원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전북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또한 일부 적자 노선에서는 운행 중단이나 축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도민 교통 서비스 안정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버스회사 관계자는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도민 교통 서비스 안정과 시외버스 업계 경영 정상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법원의 결정으로 버스회사 경영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전북도의 재정 운용과 교통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와 도민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교통권을 헌법에 보장하며, 단순한 자본 논리가 아닌 국민의 이동권 보호라는 교통약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자경위, 취약계층 보호 방안 모색… 유관기관 실무회의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2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보호 실무 분과회의를 열고, 청소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는 도청·도교육청·도경찰청·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해 수능 이후 청소년 일탈 예방과 스토킹·교제 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차단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논의했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수능 이후 방학 시즌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유해환경 합동 점검 강화를 통해 일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예방 사업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